이낙연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추진"

무등산 방공포대, 마륵동 공군탄약고도 동시 이행
이전 부지에는 미래먹거리 터전 '스마트시티'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3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조기에 추진할 것임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군공항 뿐만 아니라 무등산 방공포부대와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의 군공항 이전 방식으로는 그 실행 여부를 가늠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 이전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맞추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또 만약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일을 지자체에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도왔다. 그런 방식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방식을 정부 주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공항 수용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군공항 수용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확보된 군공항 터에는 "송정리·영산강·황룡강 일대까지를 포함해 미래 먹거리의 터전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그 일을 광주시·시민사회와 협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이뤄질 경우 광주는 군공항의 이전과 함께 세 가지 효과를 얻어낼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무등산 방공포부대의 이전을 서두를 수 있게 된다. 방공포부대는 이미 수년 전에 이전키로 했으나 군공항 이전 논의와 결부되면서 자동적으로 유보돼왔다.

방공포대 이전은 무등산 환경생태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무등산 서석대에서 정상, 북봉, 신선대에 이르는 정상권의 생태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따라서 방공포대가 이전될 경우 생태복원과 함께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면모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마륵동 공군탄약고는 약 65만평(217만㎡)에 달한다. 이 역시 군공항 이전에 묶여 현 공군부대 인근에 이전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수년째 이전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마륵동과 금호동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 개발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이 조기 해결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군공항 및 민간공항으로 인해 공항 주변 수백만 평 땅이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을 지체시키던 문제도 해결 가능해진다. 군공항 이전이 정부 주도로 조기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 대한 이상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지므로 군공항 부지와 함께 스마트 시티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스마트시티는 주거, 업무빌딩, 에너지, 모빌리티 등 도시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기술을 이입하여 업무와 휴식,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농업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미래도시를 말한다"면서 "국가적 미래도시 모델로서 견본도시를 광주에 만든다는 것이 저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대장동에 초강경…이재명 '직선 본능', 약될까 독될까

논의하는 민주당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대응 과정에서 '직선적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추석연휴 내내 직접 대장동 의혹 공방의 전면에 서서 초강경 발언을 거듭했다.

의혹에 대해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고 일축한 데 이어 비판자들을 향해서는 역공을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 토건 세력을 하나로 묶어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선 "중범죄", "집단학살범죄 이상"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책임론을 덧씌우며 반격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5·18 당시 언론의 '폭도 난동' 보도에 빗대기도 했고, 당내 특정 인사들을 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호남 모독'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반격을 부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무료 변론' 논란 와중에 윤영찬 의원을 "흑색선전 범죄"라고 비난하거나, 이천 화재 당시 '먹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집중 공세의 표적이 될 때마다 전면에 서서 강경 발언을 내놓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 지사의 스타일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 발현된 셈이다.

이런 스타일의 득실을 두고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상대의 공세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쏟아지는 의혹에 숨지 않고 정면 대응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줘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유독 이번 의혹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관망 중인 이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수박' 논란 등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표현들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기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도 외면

신정훈 "공공기관이 적극 도입해야"

대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상생결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작 도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부족하고 활용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개(27.3%),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개(48.5%)로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들이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5·18 유공자, 10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민형배 "실질적 지원강화로 제대로 예우해야"

5·18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나 국가유공자 유형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2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5·18민주유공자 4천295명 중 9.78%인 420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9만3천817명 중 4.53%인 2만6천89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민 의원은 "5·18민주유공자는 물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348명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질적 지원강화로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野, 이재명 국정조사·특검 법률안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